

한국 민주화와 사회운동: 민주화 과정의 특징과 사회운동의 재편

이 영 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재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떠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가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것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6월 항쟁에서 결과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운동의 분화가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때 한국 사회운동에서 끊임없이 조직화 되고 있는 저항은 민주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그것이 정치사회에 투영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이 당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6월 항쟁에서 결과한 민주주의는 기대와 달리 군부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가져오지도 못하였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포용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주제어: 사회운동, 6월항쟁, 시민사회, 정치사회, 민주화

* 동국대 박사수료

1. 서론

한국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화 이행은 문민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공고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고(임혁백 1997; 송호근 1994; 조효래 1995),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한국과 비슷한 시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남미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행을 넘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평가에는 ‘공고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인가’ 또는 현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공고화 되었거나 공고화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²⁾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배제되어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현재 민주주의의 골격이 되고 있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민주화, 즉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다. 이 당시 요구된 법·제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심화·확장시키기 위한 기획이었기보다는 당면한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방향

-
- 1) 윤상철은 다른 논자들과 달리 1988년 말까지의 시기를 민주적 이행기로, 1989년 이후의 시기를 제한된-정체된 민주주의의 공고화기로 해석한다(윤상철 1997). 웨보르스키는 공고화의 척도로 정치적으로 상호 관련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을 민주적 과정의 불확실한 상호작용에 맡기고 민주적 과정의 결과에 순응하는 체계, 갈등의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해결, 누구도 사후적인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며 결과는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인 예측 가능성만을 갖고 있으며 관련된 정치적 세력들의 순응을 야기할 경우를 들고있다(웨보르스키 1997: 81).
 - 2) 대표적인 논자인 최장집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수적으로 귀결되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최장집 2002).

과 속도는 직접적으로는 집권세력과 야당, 즉 정치사회에서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민주화의 결과 정치사회는 활성화되었고 활성화된 정치사회는 시민사회와 분리되어진다. 정치사회의 활성화는 민주화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재편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민주화 이행과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의 형성으로 인한 정치사회에서의 각종 개혁정책의 시행,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은 민주화운동에 전념했던 사회운동³⁾의 재편을 가져오게 된다. 민주화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한 최대저항연합으로서 민주화운동은 야당의 분리와 다층적, 다방면적의 이해를 갖는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분화되는데, 크게는 노동, 빈민, 농민 등 전통적 이슈에 기반한 민중운동과 환경, 여성, 학술훈, 문화운동 등의 시민운동으로 분화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화의 공고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정체는 한편으로 시민사회 분화의 지체를 초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으로 하여금 참여와 저항의 공존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글은 민주화 과정에서 각 세력들의 관계, 특히 정치사회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6월 항쟁에서 기인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특정한 사회제도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장상환·정진상 2001: 20-22), '사회경향에 대한 대응으로서 권력과 질서를 변화시키는 시도(사회문화연구소 편 1995: 73)와 같이 좁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의식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유팔무 2001: 187)' 또는 '국가, 경제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 하는 세력(김정훈 2001: 156), '공유된 집합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문화적 갈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개인, 집단, 조직들 간에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조대엽 1999: 50-51)' 등과 같이 넓은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 체제내의 시민운동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화는 최대저항연합으로서 민주화운동의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저항에 의해 집권세력이 사실상의 항복인 6·29선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로 분류되기도 하고(손호철 1996: 206), 집권세력과 저항세력의 힘의 균형의 형성으로 타협에 의해 민주화가 진행되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Huntington 1997: 163)’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저항, 즉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의한 지배세력의 굴복을 민주화 이행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세력균형 하에서 집권세력과 야당세력의 타협을 민주화 이행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은 민주화 이행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민주화 이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한국에서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화라는 두 가지 양식이 결합된 이행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의한 구체제의 붕괴와 정치 엘리트간 협약에 의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은 운동과 협약에 의한 민주화 과정의 결합에 의한 것이었다(최장집 2002: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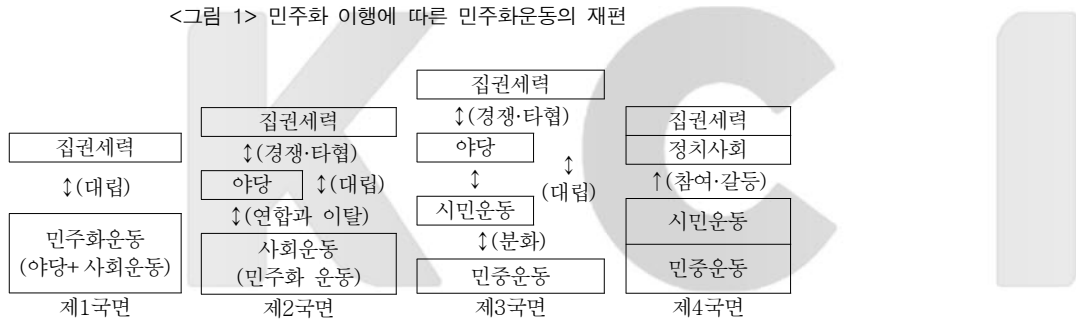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는 6·29선언 이전의 시기를 살펴볼 때 민주화운동의 저항 강도와 지속성은 민주화 이행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배세력은 저항에 직면하여 현 지배체제의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현 지배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이영제 1999: 24-28) 특정 국면에서 형성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역관계가 민주화의 이행이냐 아니면 현 지배체제의 지속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 지배세력이 민주화운동보다 힘의 우위에

있을 경우 현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열세에 놓이게 될 경우 지배세력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타협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위기에 직면한 지배세력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를 제시하고 야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다. 이 과정은 민주화운동에서 야당의 분리에 따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와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의 재편을 수반하였다.⁴⁾

민주화운동에서 야당의 분리는 민주화를 둘러싼 세력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의 진전보다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최소한의 수준의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머물게 한다. 여기서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이 정권을 선택한다는 ‘국민주권’의 확인과 확장으로서의 민주화의 의미보다는 독재정권의 퇴진에 방점을 둔 것이었으며,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은 독재정권의 퇴진과 더불어 주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림 1> 민주화 이행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재편



4) 이 글에서 시민사회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개인이나 단체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소통하는 공간이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재편된다. 우선, 민주화운동이 지배세력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지배세력은 무력 동원을 포함한 억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화운동에서 온건세력의 분리 내지는 포섭을 시도하게 된다. 위의 <그림 1>에서 제1국면은 집권세력과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냐 아니면 현 지배체제의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대립이 대통령 직선제와 호헌으로 표출되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이다. 야당은 민주화운동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현 정권의 붕괴를 통해 권력을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세력과 타협을 시도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 소위 ‘이민우 구상’⁵⁾은 저항과 타협을 둘러싼 야당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가 1986년 12월 7개항의 자유화조치가 선행되면 민정당의 내각제개헌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발표에 대해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이들의 직선제 개헌노선을 따르는 국회의원 75명이 탈당함으로써 내각제 개헌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되는데(정대화 1995: 95), 이는 야당과 군부독재정권과의 타협이 최소한 대통령 직선제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는 사건이었다.

제2국면은 야당이 민주화운동에서 분리되어 최대저항연합이 해체되는 국면이다.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세력의 물리력의 동원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⁶⁾ 여기서 야당이 이미

5) 소위 ‘이민우 구상’의 7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지자체 실시, ②언론기본법 폐지 등 언론자유 보장, ③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④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⑤국민에 뿌리내린 2개 이상의 정당제도 보장, ⑥공정한 국회의원선거법, ⑦용공분자를 제외한 구속자 석방 및 사면복권 등이다(정대화 1995: 95).

6) 6월 항쟁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무력동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급진적 저항을 억제하고 타협으로 이끌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 무력동원의 가능성은 6·29선언 이후 여·야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는데 1987년 7월 19일 뉴욕 타임즈에서는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모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법국민주진위원회 1997: 746)’이라는 발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이슈로 바람을 일으켜 1985년 12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6·29선언에 직면하여 불확실한 투쟁의 지속 대신 결과가 보장된 타협을 선택하게 된다.⁷⁾

야당은 6·29선언에서 제시된 조항 중 대통령 직선제라는 헌법개정과 선거 절차의 규정이라는 정치협상에 몰두하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적 절차의 회복만으로도 군부독재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이에 국한된 정치협상을 민주화와 등치시키게 된다. 이미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협 공동의장 시절에 직선제는 내각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가 행해진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것(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28-29)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정치협상의 한계를 예견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협상의 과정에서 이미 획득된 것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 몇 항목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헌법개정에서 국민의 발의권과 소환권 등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탄압이 다시 강화되었다.⁸⁾

단절의 수단으로써의 선거와 야당의 분리는 지배세력에 대한 민주화운동 우위의 해소로 귀결된다. 6·29선언 이전까지의 대립이 민주화운동과 지배세력이라는 단일한 구도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립은 야당의 이탈로 수동화된 ‘민주화운동’⁹⁾과 정치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7) 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은 ‘직선제 개헌’을 이슈로 바람을 일으켜 67석을 획득하여 148석을 얻은 민주정의당에 이어 제 2당의 위치를 굳히게 된다. 득표에 있어서 민정당과 신민당은 각각 7,040,811표와 5,843,827표를 획득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 98). 이와 같은 신민당 돌풍은 민주화운동으로 하여금 지배세력의 6·29선언에 대해 전면적인 대립이 아닌 타협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된다.

8) 이에따라 야당은 “투쟁은 국민이 하고 타협은 정치가가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531)”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9) 민주화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수동적이 되었으나 다른 차원의 민주화 운동에서는 능동화 된다. 여기서는 다른 차원의 민주화 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칭할

대표하는 야당, 그리고 지배세력의 다차원적인 구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사회의 복원은 대립을 선거 경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선거 결과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의 속도와 방향이 좌우되는 유동적인 국면에 진입하게됨을 의미한다.

제3국면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정치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하에서 경쟁하게 되고, 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어진다.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이행되면서 시민운동은 점차 제도화 되어가지만 여전히 민중운동은 억압과 배제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된다.¹⁰⁾ 따라서 정치사회에서는 타협과 경쟁이, 시민운동에서는 견제와 참여가, 민중운동에서는 저항이 주된 행위양식이 된다.

제4국면에서는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진행된다. 이 국면에서 사회운동은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와 저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내의 개혁세력과 연합하여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 즉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정치사회와 갈등하게 된다.



것이다.

10)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후인 1987년 10월 13일 “현 군사독재 정권은 집권 연장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화라는 이름을 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부독재 연장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민주투사인 양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국민적 투쟁을 새롭게 전개”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595-596).

3.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는 지배세력과 민주화운동, 다른 수준에서는 민주화운동 내에서의 지향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먼저 지배세력에게 1987년 6월은 민주화운동의 저항에 따른 억압의 비용이 체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하게 됨에 따라서 지배체제의 합리화 과정으로써(조희연 1998: 14-16, 253-266), 야당에 대한 포섭이라는 정치적 장벽 내에서의 민주화라는 의미를 지닌다.¹¹⁾ 반면에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저항의 직접적, 당면한 목표였던 직선제 쟁취와 보다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야당의 제도적 편입, 그리고 자율적 시민사회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1) 민주화운동의 수동화와 민주화의 정체

민주화운동의 기대와 달리 대통령 직선제 헌법 쟁취와 야당의 제도적 편입이 시민사회의 확장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야당과 분리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와는 달리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도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항쟁의 과정에서 저항의 초점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복원’ 즉, 시민사회의 확장보다는 정치사회의 정상화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다음으로 민주화 과정이 급속하게 전개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11) 브라질의 경우 정치적 변화의 공간에 대한 제도권 정치인들의 재빠른 장벽 쌓기로 진보(운동)정당의 정치적 약진은 봉쇄되어 졌다(Ruth Berins Collier and David Collier 1991: 33-35).

찾아볼 수 있다.

군부독재 정권과 단절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흐름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하여 전면화 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폭력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타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규모 저항을 조직하게 된다.

민주화운동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이 현행 헌법으로 정부를 이행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저항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진다.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정권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에 대항하여 ‘군부독재 종식’의 수단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저항의 초점이 ‘민주헌법 쟁취’로 모아지게 된다.¹²⁾ 여기서 촉발된 민주화 이행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체제의 붕괴나 전복이 아니라 선거에 의한 군부독재정권의 퇴진이라는 단절, 즉 ‘절차의 복원’으로써 정치사회의 정상화에 집중되어진다.

절차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구조의 대변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선거민주주의만의 회복(임혁백 1992: 379)과 ‘단절적 이행(ruptura)(Linz 1978: 35)’을 요구하는 세력이 민주화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정권의 퇴진 없는 ‘연속적 이행(reforma)’의 형태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수동적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민주화 이행은 ‘서구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전개(최장집 2002: 95)’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게 되었다.

12) 이것은 국민운동본부의 전략적 패착과 정치력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정대화 1995: 113).

첫째, 민주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으로써 민주화를 주도한 저항의 주체로서 민주화운동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국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동시에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게 된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지 못한 저항의 주체들은 ‘민주화’와 ‘제도화’의 이름으로 탈구된 정치사회에 개별적인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대중과 분리된다(정대화 1995: 138-140). 항쟁의 과정에서 저항의 주체였던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타협과 경쟁의 국면에서는 동원의 대상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

둘째, 급속한 세력의 재편 내지는 단기적인 민주화의 급속성은 ‘절대적’으로 덜 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급진적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언론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 군부독재정권은 ‘보도지침’과 기관원의 언론기관 출입 등으로 여전히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354-355).¹³⁾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중간계층(혹은 중산층)은 이와 같은 변화의 양과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그것을 조절하게 된다(윤성석·이삼성 2002: 195-196).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진전된 민주주의는 아직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강력한 반동(react)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셋째, 민주화의 경향성 및 보편성¹⁴⁾에 대한 과도한 신뢰이다. 민주

13)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중간계층(혹은 중산층)은 이와 같은 변화의 양과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그것을 조절하게 된다(윤성석·이삼성 2002: 195-196). 여기에는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언론의 영향이 매우 컸다. 군부독재정권은 ‘보도지침’과 기관원의 언론기관 출입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354-355).

14) 여기서 경향성은 현재의 민주화에 속도와 수준에 비추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상적 믿음을, 보편성은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가 획득되어 졌을 때 사회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그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한다.

화의 경향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운영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제도를 민주화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러한 민주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낳는다. 이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에게 나타나는 공통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써,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제도는 지배세력과 피지배 세력에게 공히 절대적으로 민주화된 제도로 인식되어진다. 끝으로 민주화의 보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고작해야 가장 덜 비민주적인 지점에서 획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민주화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 과정의 급속한 전개¹⁶⁾와 민주화운동의 시민사회 확장 프로그램의 부재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유보한 절차적 민주주의만의 제도화 즉, 민주화 흐름의 단절이라는 ‘보수적 사회기반의 강화(최장집 1993: 372)’로 이어지게 된다.

2) 정치사회의 능동화

민주화 이행 이전의 형식화된 정치사회에서 야당은 민주화운동과 지배세력의 관계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된다. 먼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야당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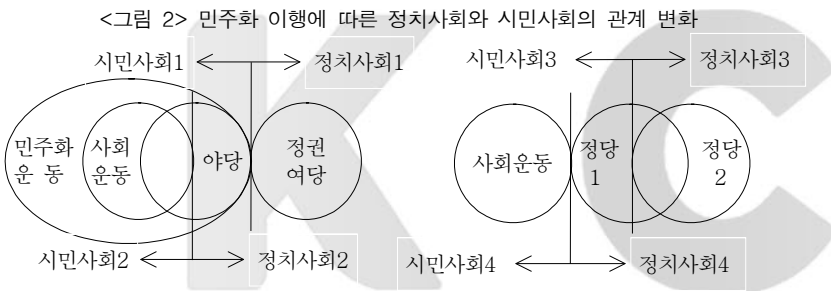
15) 이는 곧 민주화를 위한 동원의 한계로 나타난다. 1987년 10월 31일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여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거행한 ‘거국중립내각 수립 및 양심수 석방 결의대회’는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의 참여가 저조했다(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8: 154).

16) 한국에서 민주화과정은 급진적(radical)이기보다는 급속히(rapidly)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쟁과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와 그에 기초한 탄압이라는 외적인 조건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최대연합의 구성의 필요성이라는 내적인 조건에 기인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경우도 목표는 군부독재 퇴진이었지만 방법은 ‘직선제’에 국한되었다.

회운동과 이해를 같이하여 민주화운동이라는 최대저항연합을 형성하게 된다. 6월 항쟁과정에서 야당은 형식화된 정치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된 갈등의 장은 형식화한 정치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경계에서 형성되어진다. 민주화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아래 <그림 2>에서 시민사회1과 정치사회1의 구분에서와 같이 정치사회의 지배세력과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6·29선언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현되는 것은 정치사회의 실제화에 국한되어진다. 항쟁 이후 야당의 장외투쟁에서 정치사회로의 복귀는 <그림 2>에서의 시민사회 2와 정치사회 2의 관계로 변화시키게 된다.¹⁷⁾ 대립이 민주화의 여부가 아니라 민주화의 내용과 속도로 전환됨으로써 최대저항연합으로써 민주화운동은 점차 해체되고, 야당은 장외투쟁이 아닌 정치사회에서의 경쟁에 가담하게 됨에 따라 사회운동과 분리된다.

6월 항쟁의 결과로써 정치사회의 복원과 대선 실패¹⁸⁾에도 불구하고



17) 1에서 2, 3에서 4의 폭은 야당의 행위의 폭을 의미한다.

18) 이는 야당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이 경쟁과 참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초보적 수준의 언론, 표현, 조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른바 '선거민주주의 오류(Diamond 1999: 8-9, 64)'에 빠져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뒤이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정치사회는 실패로 끝난 시민사회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정치사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역전된 세력관계는 6월 항쟁에서 얻으려 했던 결과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화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활성화된 정치사회는 지배세력과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통해 스스로의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능동화된다. 이는 <그림 2>에서 시민사회2-정치사회2의 관계에서 시민사회4-정치사회4로 이동한 것에서 볼 수 있다. 1990년 전격적으로 단행된 3당 합당은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능동화된 정치사회에 기반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정치사회의 능동화는 사회운동의 재편을 가져오게 하였다. 민주화운동은 저항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민주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참여와 저항이 동시에 조직되기 때문이다.

3) 사회운동 지체된 분화

민주주의 이행과 정치사회의 활성화는 사회운동을 민주화를 위한 저항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분화와 재편을 가져오게 한다. 분화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6월 항쟁에서 결과한 민주주의가 충분한 민주화로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6월 항쟁이 낳은 민주화가 여전히 불충분한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양자에게 있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화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이후 어떠한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게 된다.

민주화운동 이후에 분화되었다고 이야기되는 많은 민주화운동을 구성하고 있던 많은 개별사회운동들은 민주화 이전에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목표와 조직, 운동방식, 구성원을 갖고 있었다.¹⁹⁾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는 개별 사회운동들은 자신의 고유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차적으로 비민주적인 상황이 장애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고유한 목표를 잠재화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지만, 충분히 민주화가 진전되어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에서 벗어나 고유한 목적을 가진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사회운동 복원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운동의 출현을 통해 분화되고 재편되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서 활성화된 것은 새롭게 탄생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개별 사회운동들이었다. 1987년에는 1,500명의 교사들이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1989년에는 2만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1989년 3월에는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으며 1990년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에는 ‘전국민민연합’이 출범하고, 1989년 출범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1991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으로 발전하게 된다.²⁰⁾ 이것은 당시 민주화 수준이 시민운동의 토대로 작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1988년 탄생한

19) 여성, 환경, 인권 등 소위 시민사회에서의 비 계급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운동단체들은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도 존재하였다. 단지 민주화 이전에는 주요 모순을 군부독재정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에 포함되는 것이다.
20) 유팔무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비정부조직들의 발흥에 대한 연구에서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이후, 가장 현저하게 늘어난 비정부단체는 노동조합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유팔무 2001: 192).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은 1993년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민족민주운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시민운동의 성격을 명백히 하는 ‘환경운동연합’으로 재편된다(유팔무 2001: 190-197).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라 일컬어지는 대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1987년 6월 직후가 아니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의 시기이다.²¹⁾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의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분화되었다는 분석과는 다르게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체제내의 온건한 시민운동의 출현은 지체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체제 외부에 존재했던 운동세력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주화되었을 때에서야 체제 내적인 운동으로 전환된다. 시민운동 중에서 소위 우파라 불리는 ‘경실련’이 1989년 출범하고 좌파라고 불리는 ‘참여연대’가 1994년 출범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YMCA와 흥사단과 같은 종교적 시민운동단체들은 민주화 이전의 시기부터 줄곧 활동 영역을 확보 할 수 있었다(유팔무 2001: 190-197).²²⁾

21) 이기호는 김영삼정권 하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민운동이 분화되어지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정권의 존립을 거부하는 반체제 운동이 아니라 체제를 긍정하는 가운데 체제를 변혁시켜야하는 자기제한적 급진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사회운동은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개혁의 이슈(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사회에 대하여 영향력(이니셔티브)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가져왔다(이기호 1997).”고 주장한다.

22) 여기서 시민운동의 성장은 단순한 민주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4.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1)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사회운동의 저항

한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된 사회운동은 민주화와 결부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된 4·19혁명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족모순의 해소 즉, 통일이라는 과제를 제기하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향이 반복되어 제기될 뿐만 아니라 7·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계급적 문제를 포함하여 확대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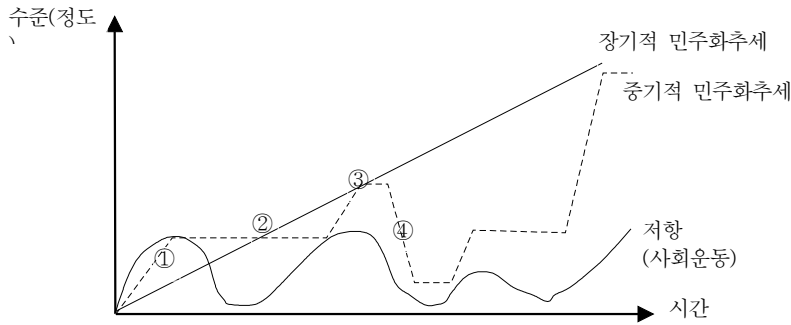
역설적으로 민주화 투쟁 이후 이슈가 확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급진전되었던 시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유보되거나 또는 바로 직전에 급진전된 민주주의, 즉 이미 제도화되어 역동성을 상실한 절차적 민주주의 하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미 정의되어(defined)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 그것을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은 이데올로기와 경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가능하면 잠재적으로 보류되어야 하는 것 내지는 파괴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력은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세력으로서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희유포섭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항시적으로 제도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만들어

23)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6월 항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지점들이 존재한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결과 발생되어 질 수 있었으나, 6월 항쟁이 결과한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낸다. 사회적 공론은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와 행정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제도화와 동시에 비제도적인 영역을 남겨놓게 된다. 이런 비제도적 영역은 비민주적인 영역이 아니라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영역들이다. 정치적 자유권의 확대와 경제적 자유권의 제한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스기하라 야스오 1995).

<그림 3> 사회운동의 저항과 민주화추세



위의 그림에서 ①은 민주화가 진전되는 시기이며, ②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일단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소진될 때까지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체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조직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된다. ②에서 ③의 과정은 새로운 저항의 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로 진전되는 것을 나타내며 ④의 과정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독재와 반독재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최대연합이 다수의 힘으로 제도화된 소수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하지만 6월 항쟁에서 비롯된 절차적 민주주의 하에서 이와 같은 기획은 제도화된 다수의 의견만을 반영하게 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6월 항쟁 직후 벌어진 노동자 대 투쟁은 6월 항쟁으로 획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었다.²⁴⁾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밖에 위치한 노동자 세력이 민주주의를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²⁵⁾

시민사회가 분화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가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다수의 동원에 의해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으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운동의 저항은 이와 같은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와 제도화된 다수의 동원에 의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²⁶⁾ 따라서 향후 진행될 민주화는 제도화됨으로써 포용성을 상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24) 이에 대해서는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실험.” 『한국민주주의 이론』, 한길사; 강정인, 2002. “정치, 죽음, 진실: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참조.

25) 이에 대해서는 노중기, 1997.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6월민주항쟁과 한국 사회 10년 I』, 당대); 안승천, 2002.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전대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참조.

26) 부안 위도 핵 폐기장 건설 관련 사태는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점을 보다 명확히 들어내 주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충돌, 법·제도와 국민의 이해와의 괴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슈면에서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은 환경운동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핵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여론과 문화행사 등 체제내적이고 온건한 방식뿐만 아니라 과거 사회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대중동원 방식과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은 참여가 아닌 저항을 조직화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제도화된 민주주의 하에서 참여의 결과는 핵 폐기장 건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은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민주적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해당 주민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다.

투쟁 속에서 다시 기획될 수밖에 없게 된다.

2)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운동에서 시민운동 부분이 활성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우선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점차 합법적 영역에서 이해의 표출을 가능하게 되었고, 절차적·형식적 제도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항의 주체가기보다는 참여의 주체로서의 시민 운동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저항이 아닌 동반자적인 참여가 강조되는데 ‘시민사회는 이제 과거 민주화운동의 시대에서 처럼 단지 억압적 정부에 대항하는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꼭 어떠한 역할을 담당(정수복 1996: 16)’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과 맥락을 같이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확대를 가져오고, 확대된 시민사회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저항과 참여를 조직화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이행된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갈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사회의 탈구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1987년 6월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기획은 민주주의를 심화·확장시키는 기획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배세력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치사회에 고도의 자율성을 부과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해 익명화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를 추가하는데 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다양한 이슈의 개발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담지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기획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으로 일정한 시기 타협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국면에서 유효(조희연 1998: 146-148)함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나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회운동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형태로 공고화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운동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현재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선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조직되는 것은 일단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고도의 경직성을 갖게 됨으로써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해서야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확장시켜 새로운 갈등과 이슈를 등장시킨다. 새로운 갈등과 이슈는 비제도화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은 또 다른 참여와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게 된다. 총선연대의 낙선·낙천운동과 같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나드는 사회운동은 공고화되어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는 실천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그것이 정치사회에 투영되는 과정으로써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6월 항쟁에서 결과한 민주주의는 기대와는 달리 군부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가져오지도 못하였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시민운동내의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이 글은 한국에서 사회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떠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는가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것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운동의 분화가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때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끊임없이 조직화되고 있는 저항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가 불충분한 세력, 즉 민주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것은 현재까지 진전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더불어 높은 수준으로의 민주주의의 이행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87년 6월 항쟁과는 달리 정치사회의 복원과 재편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에 집중된 정치로부터 시민사회로 분산되는 정치영역의 확장(조대엽 2003: 22-23)'의 과정을 동반하여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정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과제가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였다면 이후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고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고화 과정에서 경직화된 민주주의를 유연화 하고, 여전히 소수에게 위임된 권력을 해체,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유연화는 권력에서 소외된 사회세력을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 즉 권력의 배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절차적 민주주의 하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치(governance)와 파트너십(partnership)은 권력의 '분점'이 아니라 권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기보다는 행정의 모델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는 '형식적 차원의 방법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배분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회집단이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에 참여(김동춘 1997: 78)'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엮음. 1997. 『6월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사계절.
-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 강정인. 2002. “정치, 죽음, 진실: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 김동춘. 1997.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사.
- 김정훈. 2001. “진보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이론적 탐색”,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 노중기. 1997.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동아일보사.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 운동』, 동아일보사.
- 사회문화연구소 편. 1995.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손호철. 1996. “한국민주화 이론 비판.” 『이론』 1996년 여름·가을호.
- 송호근. 1994. 『열린 시장, 닫힌 정치』, 나남.
- 스기하라 야스오. 1995. 석인선 역. 『인권의 역』, 한울.
- 아담 웨보르스키. 1997. 임혁백·윤성학 옮김. 『민주주의와 시장』, 한울.
- 안승천. 2002.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 유팔무. 2001.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 유팔무·김호기 엮음.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성석·이삼성. 2002.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민주주의 발전.” 『한국동북아

논총』 제24집.

- 이기호. 1997. “김영삼정부시기의 정치와 시민사회의 분화: 사회운동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논문집』.
- 이영제. 1999. “한국 지배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 6월항쟁 이후 국가의 포섭과 시민사회세력의 대응.”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혁백. 1997. “자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
- _____. 1992.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장상환·정진상. 2001. 『사회운동 연구의 의의와 방법』, 경성대출판부.
- 정수복. 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박영를출판사.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
- _____. 2003.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시민사회와 NGO』 제1권 제1호.
- 조효래. 1995. “민주화와 노동정치: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보수·자유·진보의 개방적 경쟁을 위하여』, 당대.
- 조희연 편.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 『제12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 이론』, 한길사.
- _____.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학술단체협의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한울.
- _____.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I』, 한울.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8. 『한국현대사4: 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 풀빛.
- 헌팅턴. 1997. “권위주의체제의 유형과 민주화의 경로”, 신윤희 외 편역. 『비교정치론강의2』, 한울.
- Berins, R. and Collier, D. 1991. *Shaping the Political Are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imond, L.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Linz, J. J. and Stepan, A. (eds.).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K C I